

광주 북구 주민 '자치구간 경계조정' 반발

풍향동 등 6개동 "주민동의 없이 동구 편입 반대" 광산구의회도 주민 의견 반영 촉구 성명

광주시 동구와 인접한 북구 6개 동 주민이 '자치구 간 경계조정'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데 이어 광산구의회가 성명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해 줄 것 등을 촉구하는 등 구간 경계조정 관련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풍향동, 두암 1·2·3동, 문화동, 석곡동 등 광주 북구 6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동구 편입 반대'를 내용으로 한 현수막을 동별로 15개씩 내걸었다. 북구의 다른 21개 동도 북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이름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7·8개씩 동별로 설치하는 등 반발 움직임에 동참했다.

이들은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광주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를 위해 북구 주민 동의 없이 동구에 인구를 대거 편입시키는 것은 반대한다"며 "특히 북구 8경(景) 중 무등산, 국립 5·18 민주묘지, 원효사, 환벽당, 호수생태원 총 5경을 동구에 내주는 안이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구 6개 동 주민자치회는 반대 성명 발표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은 없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의의의 면담을 진행하고 시에도 반대 의사를 전달하기로 했다.

문창희 풍향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최근 광주시 용역안대로라면 북구 6개 동은 동구 편입을 피할 수 없다"며 "경계조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행동에 나설지는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도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성명서'에서 "광산구 인구에 반대여론이 팽배한데도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여러 경로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경계조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에 ▲해당지역 주민과 구의원들의 의견을 최종보고에 반영할 것 ▲비용 절감과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경계조정할 것 ▲중·대폭 조정의 경우, 가칭 접단구를 신설할 것 ▲주민투표 시 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사)한국조직학회, (사)경인행정학회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3개 시안을 놓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산 바 있다. 1안은 북구 일부 동구 편입의 소폭 조정안, 2안은 첨단 1·2동 북구 편입 및 북구 일부 동구 편입의 중폭 조정안, 3안은 5개 자치구 전체 경계를 바꾸는 대폭 조정안이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 경계조정 최종 개편 시안이 마련된다. 개편 시안이 마련되면 준비위원회 논의, 시·구의회 등 정치권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수목비엔날레 상설 전시관 짓는다

전남도 용역비 1억 예산 반영 김지사 "전남 미적감각 살려야"

전남도가 국제수목비엔날레 상설 전시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건립 용역비 1억원을 반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실국장 정책 회의에서 올해 처음 열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과를 높여 평가하고, 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상설전시관 건립방안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국제 수목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도민 자긍심 높일 수 있도록 해줘 감사하다"며 "국고지원을 더 받을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목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용역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전시관 자체가 하나의 미적 감각을 살린 전남의 자랑스러운 전시관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수목비엔날레는 이번 행사 기간 전시관이 목표와 진도의 6개 미술관으로 분리돼 행사 전부터 관람객 불편이 예상된다.

목포전시관은 목포문화예술회관·노예애공예미술관·목포연안여객선 갤러리로, 진도 전시관은 운림산방 남

도 전통미술관·진도향토문화회관 옥산미술관·금봉미술관으로 떨어져 있어 관람객들이 이동하면서 전시회를 보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부 전시관은 시설 자체가 협소하고 노후해 국제수목비엔날레 전시관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시설 불편함에도 이번 수목비엔날레 관람객이 29만명을 넘어선 등 성과를 올리자 상설전시관 필요성이 지역 미술계에서 제기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비엔날레 건립용역에 착수하기로 하고 현재 1억원의 전시관 건립 용역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제 겨우 1회를 마친 수목비엔날레의 지속적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상설전시관 건립이 시급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일부 다른 시각도 있다.

상설전시관을 위해서는 건립비용은 물론 유지비용과 인력이 지속해서 소요되는 만큼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목비엔날레 상설전시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비엔날레 시작 전부터 있었다"며 "지역미술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 전시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중화운동 관련자 유족에 광주시, 생활지원금 지급

광주시가 내년부터 민중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민중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당 생활보조비 월 10만원·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을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민중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민중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오는 12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내년 1월 11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으로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6일 "민중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문의는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 (062-613-2202). /오광록 기자 kroh@



서구민 자치·복지 어울림 한마당 '2018 서구민 자치·복지 어울림 한마당'이 6일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서대석 서구청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구민들과 함께 비빔밥을 비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복원 속도 낸다

7명 구성 실무 전담팀 이달말 출범

옛 전남도청 복원 작업이 전담팀 출범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옛 전남도청 복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옛 전남도청 실무 전담팀이 이달 말까지 구성된다.

전담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조직으로 문체부 4급 팀장을 포함해 문체부 3명,

광주시 2명, 아시아문화원 1명, 민간 등 총 7명으로 꾸려진다. 전담팀은 도청 별관 4층에 마련될 사무실에 상주하며 복원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 민원실, 전남경찰청 본관과 민원실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아직 건물이 남아 있는 상무관은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소는 연구 용역을 맡아 5월 항쟁 기간에 발생한 주요 사건과 건물 내외부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사·분석 중이다.

전담팀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술직을 총원하는 등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면서 원형이 훼손됐다.

오월어머니회 등 5월 단체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옛 전남도청에서 원형복원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다. 지난달 30일 4박 5일 일정으로 청와대 등을 방문해 "복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복원 실무를 위해 통합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이낙연 총리의 방침에 따라 전담팀이 꾸려질 예정"이라며 "팀이 꾸려지면 복원 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우선협상자 8일 결정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우선협상자가 8일 결정된다.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재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7일 시민심사단, 8일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앞두고 중앙공원 1지구에 제안서를 제출한 광주도시공사에 대해 일각에서 '땅장사' 논란을 제기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내 "광주도시공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참여와 관련 '땅장사'라며 그 의미를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작성에는 광주전남녹색

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사)푸른길, 공원일몰제 민간거버넌스 민간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시설인 도시공원에서 진행되기에 공영개발로 사업수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다"며 "공기업을 통한 공영개발은 토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이를 단순히 '땅장사'라 부르는 것은 공익일몰제의 공익적 해결 노력과 공영개발 구조의 불가피성을 살펴보지 못함이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시민단체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 촉구

광주시가 특혜 논란이 제기된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광주 시민단체들이 공개질의서를 내고 관련 조례 폐지를 요구했다.

광주 15개 시민단체가 모인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시민회의는 6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지역 여론 등을 존중해 새마을장학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지만 법적 근거인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서둘러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 655-6544

062) 362-3336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산수오거리지점

돌고개지점